

부평 로컬리티와 이주민*

-1945년~1960년대를 중심으로-

오미일 · 조관연**

- I. 머리말
- II. 부평 공간의 행정적 변화와 이주 유형
- III. 전재민·피난민의 이주 양상과 정착
- IV. 기지촌의 형성과 이주민
- V. 맺음말: 이주민과 부평 로컬리티

• 국문초록

일제 말기 부평에는 우수한 일본 독점자본의 군수공장과 육군조병창이 들어섰다. 이에 따라 토목기술자와 일용직 인부, 그리고 공장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자와 기술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혹은 일본으로부터 이주하기 시작했다. 이는 부평이 일본 독점자본이 의도했던 초국적 산업공간 즉 대동아공영권 내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했던 공간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해방이 되면서 공장 가동은 중지되었고, 부평역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어 서비스업종이 발달한 정도였다. 지리적 여건상 부평은 해방 직후 일본이나 상해 북경 등 중국으로부터 귀환하는 동포들의 정착지로 기능했다. 한국전쟁 때에는 주로 평안도, 황해도 지역 피난민이 인천항을 통해 유입되어 부평에 정착했다.

전재민이나 피난민들은 개별 단위로 산발적으로 정착하기도 했으나, 대개 피난민수용소 시설이나 혹은 간석지나 황무지 개간과 같은 정착정책에 의해 집단적으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7-361-AL0001).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교수(한국근현대사),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교수(문화인류학)

로 터를 잡는 경우가 많았다. 원주민들은 강한 생활력을 가진 피난이주민들의 경제력이 원주민보다 우월해지고, 이들이 부평시장의 상권을 주도하는데 대해 질시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전제민과 피난민의 집단수용소, 상이군인들의 집단농장, 한센병환자수용소와 형무소, 부랑자교화시설 등이 다수 입지한 곳이라는 부평의 이미지는 곧 ‘타자성의 로컬리티’로 투영되었다. 부평은 1940년에 인천부로 편입되었으나, 부평민들은 여전히 부평지역이 인천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차별받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1950, 1960년대 부평 이미지로 표상되는 또 한 가지는 에스컴과 주변 기지촌이었다. 해방 후 미군이 일본 육군조병창을 접수함으로써 형성된 에스컴과 기지촌은 이 시기 부평 지역경제의 구심점이었으니, 미군부대 취업과 미군 및 기지촌을 상대로 한 자영업과 기타 상업활동을 목적으로 타지인들이 부평으로 유입되었다.

• 주제어

로컬리티, 이주민, 부평, 전제민, 피난민, 기지촌

I. 머리말

오늘날 부평은 인천광역시 산하 행정구이다. 그러나 “군대를 가도, 어디를 가도, 부평 사람은 부평사람이라고 하지 인천 사람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말에서 단적으로 나타나듯 부평은 단순히 인천으로 치환되거나 포섭될 수 없는 어떤 지역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부평 지역성의 형성 요소에는 자연 지리적 조건이나 그에서 비롯된 산업경제적 조건, 역사적 시공간성, 주민의 구성과 정서 등 여러 내적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평 지역성 가운데에는 인천 내 타지역이나 서울 혹은 경기도나 다른 지방과의 교류나 관계에 의해 형성된 부분, 특히 그러한 관계 속에서 타지역이 부평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타자성’에 의해 형성된 부분도 존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인천 공설운동장에서 광복절기념식 같은 것을 할 때 부평에서 온 학교는 맨 뒤쪽 무늬에 자리를 줄 정도로 괘시를 했고, 택시요금도 인천에서 부평으로 오면 시외요금을 받을 정도로 부평이 인천으로부터 소외당한다는 인식 등이 그러하다.¹⁾ 또한 부평시를 만들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으나 좌절되고 결국 부천이 시로 승격된 것은 인천시가 稅收가 많은 부평을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부평 주민들의 의식에는 인천에 융합되지 않는 ‘부평’만의 어떤 정서적 공감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인천이지만 인천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의식은 외부인들에 의해 형성된 부평의 타자성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부평의 지역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공간구조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삶을 꾸려온 주민들의 활동과 경험, 사회적 관계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공간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사회적 공간성, 역사적 시공간성의 함축적 의미를 ‘로컬리티’라고 할 수 있다.²⁾ 부평의 로컬리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시적이고 종합적인 접근

-
- 1) “택시를 타도 인천에서 부평으로 오면 시외요금 받았어요. 시장이 타도 시외요금을 받았어. 말하자면 학력 차별도 심하고 그만큼 여기가 소외된 지역이었어요.” “어디를 가도 군대를 가도 부평사람은 부평사람이라고 하지 인천 사람이라고 절대 말 안해요. 오투동, 장기리까지 다 부평이었어요. 김포에서 차를 타도 다 시내요금 적용받았어요. 시외요금 적용받은 적이 없었어요. 중학교 다닐 때 무슨 광복절기념식 같은 거 공설운동장에서 할 때 부평에서 온 학교는 저 뒤에 뽕무늬에 가서 있었어. 그렇게 괘시를 했어요. 인천 사람들이.” (부평사편찬위원회, 『자료편: 구술증언자료』, 『부평사』 제2권(2007), 343쪽).
 - 2) 로컬리티의 개념에 대해서는 류지석, 『로컬리티를 위한 시론: 로컬, 로컬리티, 로컬리티를 위한』, 『한국민족문화』33(2009); 이상봉,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으로서 ‘로컬리티인문학’ 연구의 전망』, 『로컬리티인문학』창간호(2009) 참조.

근이 필요하다. 언제 누구에 의해, 그리고 어떤 계기로 부평이 개발되었으며, 누가 무엇 때문에 새로운 공간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주민들의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선주민과의 갈등과 포섭, 그로 인한 정체성 변화, 그리고 정치·경제적 요인의 변화에 따른 각 주체들의 인식 변화를 시기별로 살펴보는 것도 부평의 로컬리티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은 전쟁, 기근, 질병 또는 박해 등을 피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낮은 땅으로 이주하였다. 그런데 자본과 상품 그리고 노동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성격의 이주민들이 생겨났다. 이들 이주민들은 전 세계적으로 자본과 상품의 유통이 가속화되면서 그 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전지구화는 최근의 현상이 아니라 “현대의 본래적인 과정”으로, 즉 윌러스틴이 지적했듯이 자본주의는 “그 출발부터 민족국가 차원이 아니라 세계경제적 차원이었으니 자본의 열망을 국경으로 제한시킬 수 있었던 적은 없었다.”³⁾ 때문에 이주문제를 단일 국가 내의 틀 안에서 고찰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초국가적인 맥락은 이주문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주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초국가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이유에서 본 연구는 다양한 초국가적인 요인과 영향력이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부평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분석 시기는 지면 관계상 일제 말기부터 1960년대까지로 한정하며, 1960년대 말 공단 설치가 논의되어 1970년대에 공업단지화되면서 로컬리티가 변화되는 1970, 80년대는 다음 기회에 고찰하기로 한다. 소규모 로컬의 지역 이주문제를 초국가적인 맥락에서 분석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국내 이주문제가 단지 도시간 거주이동과 그 경제사회적 문화적 파생현상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지역이주문제의 새로운 연구시각을 정립하려는 것이다.

근현대 이주민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개 농업식민이나 강제동원, 징병에 의해 하와이·중국·일본·남양군도로 이주한 이들과 재일교포,⁴⁾ 그리고 해방 후 귀국한 戰災民,⁵⁾ 한국전쟁기 피난민,⁶⁾ 1960년대 말~1970·1980년대 공업화·도시화에

3) 오미일, 『開港(場)과 移住商人』, 『한국근현대사연구』47(2008), 41쪽에서 재인용.

4)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채문, 『한인의 러시아 극동지역 이주: 역사와 이론』, 『슬라브학보』15(2000); 이준식, 『일제 강점기 제주도민의 오사카 이주』, 『한일민족문제연구』3(2002); 안미정, 『在日 제주인 여성의 이주와 귀향』, 『탐라문화』3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2008). 재일교포 연구는 상당한 성과가 축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준식, 앞의 글, 7쪽 참조.

의한 지역이주에 집중되어 있다. 대개 시기별로 어떠한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적 맥락에서 사람들이 이주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어떤 방식과 경로를 통해 정착이 시작되었는지 구체적인 이주와 정착 과정의 분석에 초점이 두어져 왔다.

그동안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편입과정에 대한 분석이다. 이주민들이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점차 정착하게 되는가에 대한 고찰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개인 또는 집단/조직은 안정적이고, 복합적이며,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연결된 사회적 영역에서 손쉽게 참여자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하나의 조직화된 형태나 또는 집단적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타자의 입장에서 이주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다양한 편입모델에 대해 주목하는 것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 경우 한 개인은 하나 또는 복수의 편입양식들을 혼합해서 새로운 지역 사회에 편입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편입로라는 개념은 모든 형태의 거주와 연결을 지칭하는데, 다양한 편입로의 중심에는 사회적 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⁷⁾ 이주민들은 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연결되는데, 이 관계는 지역적, 그리고 초국가적 차원의 조직구조 안에 존재하는 제도적 또는 비제도적 결사체를 통해 형성된다. 때문에 상이한 편입로를 고찰함으로써 각 도시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내 또는 국가 단위에서의 자본 흐름과 자본지배력 그리고 권력구조들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다.

비록 연구 대상이 작은 규모의 도시이고, 이주민의 숫자 역시 상대적으로 많지 않지만, 이 같이 복합적인 연구 내용을 한 편의 논문에 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 5) 일제시기 강제징용, 징병, 농업이민 기타 이유로 해외이주했다가 해방이 되면서 귀환한 전제동포의 귀환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영환, 『미군정기 전제민 구호정책의 성격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9); 최영호, 『제일한국인과 조국광복—해방 직후 본국귀환과 민족단체활동』(글모인, 1995); 강만길·안자코 유카, 『해방직후 ‘강제동원’ 노동자의 귀환정책과 실태』, 『이세아연구』108,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2002); 여성구, 『전남 함평·장성군 귀환 생존자의 구술 사례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25, 한국근현대사학회(2003); 이현주, 『해방 직후 인천의 귀환 전제동포 구호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29, 한국근현대사학회(2004); 윤선자, 『해방 후 전남지역으로 귀환한 해외한인의 현황』, 『전남사학』22, 전남대학교 사학과(2004); 장석홍, 『일제강점기 한인 해외 이주의 강제성과 귀환 문제』, 『한국학논총』27,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2005).
- 6) 피난민에 관한 연구로는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박영도, 『피난민정착사』(속초문화원, 2000); 공윤경·차철욱, 『한국전쟁 피난민들의 정착과 장소성—부산 당감동 월남피난민 마을을 중심으로』, 『석당논총』47(2010) 참조.
- 7) 편입로 개념에 대해서는 Glick-Schiller, N./Nieswand, B./Schlee, G./Caglar, A./Karagiannis, E./Darieva, T./Yalcin-Heckmann L./Fosztó, L., “Pathways of Migrant Incorporation in Germany”, in *Max Planck Institute for Social Anthropology Report 2002-2003*(Halle: 2003) 참고할 것.

때문에 본고는 부평에 이주민이 유입되고 정착하는 사회경제적 과정만을 중점적으로 소개할 것이다. 이후 이주민들이 다양한 편입로를 통해 어떻게 정착하는지, 그리고 이주민들이 인천 또는 서울과 같이 이웃한 거대 도시들의 선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대항적 지역 정체성을 형성해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담고 있는 문화적 함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작업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본고에서는 부평 로컬리티의 여러 요소 가운데 특히 타지인들이 부평에 이주하여 정착함으로써 지역정체성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이것이 외부인들의 부평 인식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부평 로컬리티에 접근해보려고 한다. 특히 1945년~1960년대 시기에 부평지역에 유입된 이주민의 유형과 이주 양상, 지역 경제조건에 의한 정착과정 등 이주민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부평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고찰해보려고 한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상이 외부인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인식되었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부평인에게는 어떻게 투영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II. 부평 공간의 행정적 변화와 이주 유형

1. 부평 공간의 행정권역 변화

오늘날의 인천은 지형적으로 볼 때 문학산록 일대의 인천권과 계양산록 일대의 부평권으로 이루어져 있다.⁸⁾ 소래산맥과 계양산맥이 경계를 이루어 두 지역을 분리한 자연조건은 역사적으로 다른 문화권을 형성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었다.⁹⁾

부평지역은 행정적으로 분할, 편입의 긴 역사를 거쳐 오면서 관할 구역의 면적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조선시대에 인천부에 비견되었던 부평도호부는 <그림 1>에 나타나듯이 오늘날 인천시의 부평구뿐만 아니라, 서구·계양구 그리고 부천시 전역과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일부 및 구로구 일부, 광명시 전역에 걸쳐 있었다.¹⁰⁾ 그러나 오늘날 부평구는 <그림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부평도호부의 남동쪽 일

8)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사』(1997), 71쪽.

9) 부평은 인천 개항장 구도심과의 경계에 철마산이 가로막혀 있어 역사적으로 인천과의 일체감이 없었다(『부평사』제2권(2007), 343쪽).

10)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제1권(2007), 49쪽.

부로 축소되어 있다.



출전: 『부평사』제1권(2007), 46쪽.

<그림 1> 조선후기 부평도호부의 영역과 오늘날의 부평구

<표 1> 부평의 행정구역 변화와 洞 현황

연도	행정적 변화	洞數	포섭 洞區域
1310~1895	부평부, 부평도호부		
1895	도호부에서 부평군으로 강등		
1914	부천군 부내면으로 편입		
1940.4	인천부에 부내면과 서곶면으로 편입		
1956.10.1	부평출장소와 서곶출장소 개설		부평출장소: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十井2동, 富開洞, 日新洞, 九山洞, 山谷洞, 清川洞, 曉星洞, 桂山1동, 계산2동, 鶴田洞, 瑞雲洞, 三山洞, 葛山洞, 서곶출장소: 백석동, 始川洞, 黔岩洞, 景西洞, 公村洞, 連喜洞, 深谷洞, 佳亭洞, 新峴洞, 石南洞, 元倉洞, 佳佐洞
1968.1.1	부평출장소와 서곶출장소를 통합해 북구로 명명	29개 법정동, 19개 행정동	북구: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산곡동, 청천동, 효성동, 계산1동, 계산2동, 작전동, 서운동, 삼산동, 갈산동, 부개동, 일신동, 구산동/ 백석동, 시천동, 김암동, 경서동, 공촌동, 연희동, 심곡동, 가정동, 신현동, 석남동, 원창동, 가좌동, 십정1동

1988.1.1	경기도 김포군 계양면을 인천시 북구로 편입. 북구가 분리되어 서구 추가	32개 법정동, 20개 행정동	북구: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4동, 부평5동, 부평6동, 산곡1동, 산곡2동, 청천동, 효성동, 계산동, 작전동, 서운동, 갈산동, 부개1동, 부개2동, 일신동, 십정1동, 십정2동, 계양동
1995.3.1	강화군·옹진군·김포군 검단면을 인천시로 편입, 그 중 검단면을 북구로 편입. 북구를 부평구(21개동)와 계양구(11개동)로 분구	21개 행정동, 9개 법정동	부평구: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4동, 부평5동, 부평6동, 산곡1동, 산곡2동, 산곡3동, 산곡4동, 청천1동, 청천2동, 갈산1동, 갈산2동, 삼산동, 부개1동, 부개2동, 부개3동, 일신동, 십정1동, 십정2동

자료: 「행정구역, 「동별가구및 인구, 「동읍면별 세대 및 가구, 『인천시통계연보』(1961, 1970, 1990, 2000); 「연혁, 『부평구통계연보』(1995, 1996);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의 역사』(2007), 40~42쪽.

부평의 행정적 지위와 그 권역은 개항 이후 크게 변화되었다. 개항 후 부평도호부는 그 지역적 중심성이 낮아지면서 <표 1>에서 보듯이 1895년 을미개혁 때 부평군으로 강등되어 인천관찰부에 예속되었고, 부평도호부 소재지였던 부내면은 군내면으로 강등되었다.¹¹⁾ 이후 1914년 일제시기 지방제도 개혁 때 부천군 부내면으로 편입되어 명칭조차 사라졌다. 이는 개항 이후 서양 문물의 통로인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 공간 편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1930년대 말 이후 전시기에 들어서 인천부에 대륙병참기지 역할이 주어지면서 기계기구공업 육성정책 실시와 함께 내륙으로의 공간 확장이 이루어졌다. 이에 부평 평야에 육군 조병창과 일본 대자본계열의 기계기구공장이 설립되면서, 1940년 제2차부역 확장 때 부평지역은 인천부 부내면과 서곶면으로 편입되었고 부평출장소가 부평역 앞에 설치되었다.¹²⁾ 오늘날 부평지역이 행정적으로 인천부 산하로 편제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때의 공간 편성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즉 부평지역은 원래 일제 말 대륙병참기지로 인천 도시계획을 구상하고, 구인천(중구와 동구)의 인구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부평에 조병창과 군수기업을 설치하면서 인천의 부도심으로 개발되었던 것이다. 부평지역 시가 형성은 1941년에 昭和地區(지금의 부평지구) 토지구획정리에서 시작되었다.

해방 이후 1956년 10월 1일 부평출장소와 서곶출장소가 개설되어 부평지역을 행정적으로 관할했다. 이 때 비로소 ‘부평’이란 명칭이 공식적으로 부활되기는 했으나, 행정지명은 아니었다. 1968년 1월 1일 區制가 실시되면서 부평출장소와 서곶출

11) 『부평사』제1권(2007), 80쪽.

12) 오미일, 「자본주의 생산체제의 변화와 공간의 편성」, 『한국근현대사연구』53, 한국근현대사학회(2010), 133~135쪽.

장소는 북구로 명명되었으며, 1988년 북구 일부가 분리되면서 서구가 추가되었고, 1995년에는 북구를 근대 이후 발달한 부평구와 原富平에 해당하는 계양구로 분구했다.

구한말 초까지 부평군 청사는 현재의 계양구 부평초등학교 위치에 있었고, 계산 1동이 당시의 중심지였으므로 근대 이전 부평의 역사는 오늘날의 계양구에 주로 남아 있다. 1899년 경인선이 부평지역 남부를 관통하면서 발달한 부평역 부근 즉 오늘날의 부평은 ‘근대 부평’이라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부평’ 지역은 해방 이후 1967년까지 부평출장소가 관할했고, 그리고 1968년~1970년대에는 북구 관할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1995년 3월 1일 이후 부평구가 설치될 때 계양구로 넘어간 효성동·계산동·계양동 등 ‘옛 부평’도 함께 서술할 것이다.¹³⁾

2. 이주 시기와 유형

부평은 1899년 경인선이 통과하는 부평역이 들어섰지만, 일제시기에 여전히 수리조합 설립과 그로 인한 분쟁이 지역문제의 관건일 정도로, 경기도의 대표적인 비옥한 평야지대로 손꼽히는 농촌지역이었다. 이와 같이 농업이 주요 산업이었던 부평에 외지인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표 2〉 부평 이주민의 이주시기 및 동기

	이름	생년	출신지	이주 시기 및 동기	현재 직업(업종)	비고
1	안상재	1920	황해도 채령	1937년	명신당(금은빵)	
2	임덕용	?~1986	충청도	1930년대 말	남창문구	
3	이석재	1920년	서울 뚝섬	1938년 일가가 신촌(부평3동) 이주		조병창 근무로 징용에서 제외됨. 한국전쟁 전후 에스컴에서 일함. 대한청년단 활동
4	장성훈 아버지	?	충청도	1930년대 말 조선기계제작소 취직		충청도에서 처음 서울로 올라와 인부로 일함. 한국전쟁 전후에 금남제재소 경영

13) “현재 서구, 계양구에서 적어도 30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어디 사느냐고 물어보면 서구, 계양구 산다고 그러지 않고 부평 산다고 하는 것”은 부평권역이 오늘날의 부평구에 한정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자료편: 구술증언자료』, 『부평사』 제2권, 2007, 363~364쪽).

5	서동수 父		전남 진도	1943년 (부개동 이주)	부평시장에서 잡 화점	합흥 질소비료공장에서 일하 다가 경성으로 이사, 1943년 부개동으로 이주하여 농사지 음. 이후 잡화점 시작.
6	김세훈 父		김해	일제 말 조병창 취업위해 이주		해방 후 미군부대 근무, 이후 이발소 운영
7	최용길	1930	충남 공주	일제 말	농업	1963년 부평4동 거주
8	이호현 父		경기도 안성	해방 직후	의복수선, 양복점	일제시기때 양복제조 기술 익힘
9	인태연 父		경북 상주	1950년대 말	의류매장	
10	손준식	1975.1	충남 부여	1975년	맥스테크 공원	태어나서 곧 서울을 거쳐 부 평으로 음

자료: 『부평사』 제2권, 329~538쪽.

<표 2>는 부평 지역민의 구술 자료에 의거해 그들의 이주 시기와 동기, 직업 또는 종사업종 등을 정리한 것이다. 이주 시기를 보면 연령세대별로 1930년대 말~1940년대 초, 해방 직후 한국전쟁시기, 1960년대로 나뉘고 있다.

부평지역에 이주민이 대규모로 처음 유입된 것은 1930년대 말 戰時期 경인공업 지대 개발 차원에서 부평에 육군조병창과 일본 대공장이 유치되면서였다.¹⁴⁾ 이는 <표 2>에서 이주민 10명 중 7명의 이주시기가 일제 말로 나타나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해방이 되면서 타지인의 유입은 더욱 증가했다. 해방 당시 부평지역 인구는 대략 4만 명이었는데, 1962년에는 8만여 명으로 증가했다.¹⁵⁾ 이러한 인구 증가는 대개 출생자수와 사망자수 간의 차이에 의한 자연증가 요인보다 타지역으로부터의 이주민 유입 때문이었다. 시기별로 이주의 유형을 보면, 해방 직후에는 일본·중국 등지에서 귀환한 戰災民 동포, 6.25전쟁 시기에는 주로 황해도 등의 이북에서 온 피난민이 많았다.

타지인을 부평으로 유입시킨 誘因은 크게 보면 부평지역이 역사적 격변기에 인 천향과 서울의 중간지대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과 부평지역 자체의 경제적 誘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재민과 피난민은 대개 전자에 의한 것이고, 일제 말 조병 창과 일본 대공장 그리고 해방 후 주한미육군병참본부(Army Support Command

14) 앞의 글(2010), 115~116쪽, 124쪽.

15) 『철조망 주변: 미군부대촌의 현실』, 『동아일보』 1962년 7월 28일. 1962년 말 부평출장소 관할 인구는 75,981명이었다(『통계연보』, 인천시(1963), 12~13쪽).

of Korea, 이하 에스컴으로 표기) 취업을 목적으로 한 이주민과 이들을 상대로 한 관련 상업·서비스업 영업자, 1960년대 말 1970년대 공단 설립 이후 외지인들은 후자에 의한 것이다.

III. 전재민·피난민의 이주 양상과 정착

1. 이주 양상

해방이 되자 해외에서 수십년 동안 떠돌던 동포들이 귀국하기 시작했다. 인천항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지리적 여건상 상해·북경 등 중국으로부터도 많은 戰災 동포가 귀환했다. 인천항 귀환 동포는 대략 일본으로부터 65만 명, 중국으로부터 10만 명을 합해 총 75만 명으로 추정되었다.¹⁶⁾

이들 귀환 전재민을 구제하여 건국에 협력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천재외 동포구제회’ 등의 원호회가 조직되어 개인과 사회단체에서 낸 의연금을 기금으로 구호활동에 나섰다.¹⁷⁾ 이들 귀환민은 대개 신흥동 前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 방역 과정을 거친 후 고향으로 돌아갔다.¹⁸⁾ 그러나 고향에 돌아가더라도 생계 대책이 막연한 전재민들은 대개 서울 혹은 인천 등 생산활동의 여지가 있는 대도시로 유입되었다.

해방 직후 부평은 이와 같이 인천항으로 들어온 전재민의 귀착지로 기능했다. 서울에 모여든 전재민은 1946년 7월경 1,226,763명, 1947년 9월 1,563,912명으로 1년 만에 30여만 명이 증가하여 포화상태였다.¹⁹⁾ 그런데 이들 전재민을 분산 이주시키는 완충지역으로 주목한 곳이 바로 부평이었다.

또한 부평은 서울 대도시에서 시설하기에는 부적절한 기피시설의 유치지역으로도 기능했다. 예를 들어 1948년 경기도는 나병환자를 일소하기 위해 부평에 천막을 치고 강제수용했다.²⁰⁾ 그런데 1950년경 이곳에 서울의 나병환자 3백여 명을 수용

16) 『인천에 상륙할 七十五萬의 戰災同胞 위해 분발하자』, 『대중일보』, 1946년 3월 12일.

17) 『전재동포 구제 인천단체 활동』, 『대중일보』 1945년 10월 9일. 인천의 전재동포 구호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현주, 『해방 직후 인천의 귀환 전재동포 구호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29, 한국근현대사학회(2004), 참조.

18) 『작일 상륙한 華北戰災同胞』, 『대중일보』, 1946년 5월 17일.

19) 『서울 인구 1년간에 30여만 명이 증가』, 『대중일보』, 1948년 1월 21일.

시키려 하자, 기존 환자가 이들을 곤봉으로 때리는 난타극이 벌어지기도 했다.²¹⁾ 그리고 1949년에는 대통령령 제207호로 영등포와 함께 부평에 형무소가 신설되었다.²²⁾ 이와 같이 부평은 대도시 서울에 필요하지만 차단의 대상인 혐오시설을 배출하는 지역으로 기능했다.

부평지역에 상당수의 이주민이 유입된 또 하나의 계기는 한국전쟁이었다.

〈표 3〉 1953~1958년 부평지역 피난민과 원주민 상황

	6.25 前 現住民				要救護者數		
		현재 原住民	현재 피난민(%)	합계	원주민(%)	피난민	합계
1953.12 부평	30,501	26,534(87)	3,833(12.6)	30,367(100)	4,721(67)	2,307(33)	7,028(100)
인천	241,561	188,982	77,932(29.1)	266,914	35,640(46)	41,060(54)	76,700
1954.12 부평	30,501	26,734	3,298(10.9)	30,032	1,850(61)	1,178(39)	3,028
인천	239,504	187,902	74,366(28.3)	262,268	10,416(47)	11,755(53)	22,171
1957.12 부평	29,699	39,349	3,716(8.6)	43,065	2,176(75)	732(25)	2,908
인천	216,786	243,343	58,189(19.3)	300,529	13,723(47)	15,833(53)	29,757
1958.12 부평			5,854(12.4)	47,058			
인천			75,805(23.5)	322,014			

자료: 인천시, 『시세일람』, 1954, 1955, 1958, 1959.

〈표 4〉 1953년경 부평지역 洞別 피난민과 원주민 현황

	6.25 前 現住民				要救護者數		
		현재 原住民	현재 피난민	합계	원주민	피난민	합계
부평1동	7,229	7,547	771	8,318	792	314	1,106
부평2동	4,382	3,813	1,112	4,925	1,500	550	2,050
부평3동	2,300	1,637	235	1,872	234	176	410
부개동	3,982	3,045	122	3,167	367	13	380
갈산동	1,259	1,408	126	1,534	477	90	567
삼산동	830	850	18	868	253	120	373
작전동	1,189	1,327	58	1,385	59	46	105
서운동	825	876	161	1,037	120	185	305
계산동	1,987	1,611	115	1,726	379	104	483
효성동	1,176	1,067	43	1,110	120	43	163

20) 『癩病者를 구호 부평에 수용소 설치』, 『동아일보』, 1948년 11월 14일.

21) 『문둥이끼리 부평서 난투극』, 『동아일보』, 1950년 1월 12일.

22) 『영등포 부평에 형무소를 신설』, 『동아일보』, 1949년 10월 28일.

청천동	1,343	846	360	1,206	82	256	338
산곡동	3,999	3,137	712	3,849	338	410	748
소계	30,501	26,534(87%)	3,833(13%)	30,367(100%)	4,721	2,307	7,028
인천	241,561	188,982	77,932	266,914	35,640	41,060	76,700

자료: 인천시, 『시세일람』, 1954, 73~74쪽.

<표 3>은 1953~1958년 부평지역 6.25전쟁 이전의 원주민수와 피난민수, 그리고 그 가운데 구호자수를 조사한 표이다. 이를 보면 부평지역 주민은 1953년 12월경 30,367명, 1954년 말 30,032명, 1957년 43,065명, 1958년 47,058명으로 점차 증가했다. 그 가운데 피난민은 3천여 명에서 5천 명대를 점했는데, 이는 전체 부평민 가운데 약 8.6~12%에 해당했다. <표 4>는 1953년 12월 말경 부평지역 각 동별로 6.25전쟁 이전의 원주민수와 피난민수, 그리고 그 가운데 구호자수를 조사한 표이다. 이를 보면 부평지역 원주민은 한국전쟁 이전 30,501명에서 1953년 12월 말경 26,534명으로 감소했다. 6.25전쟁 때 피난했던 원주민이 미귀환했거나 혹은 사망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유입된 피난민은 부평 총인구의 13%인 3,833명이었는데, 이를 합하면 30,367명으로 결과적으로 인구가 소폭 감소한 셈이었다. 부평지역 내에서도 피난민이 많이 유입된 곳은 부평역 인근인 부평2동, 부평1동, 그리고 그와 가까운 산곡동, 부평3동이였다. 상대적으로 교통이 발달하고 상업이 활성화된 지역에 피난민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인천시 전체로 보면 전쟁 이전에 現住民은 241,561명이었으나 1953년 12월 188,982명으로 약 22% 감소했고, 피난민 77,932명이 유입되어 총인구수는 전쟁 전 대비 10%가량 증가하여 266,914명이였다. 인천 전체적으로 피난민이 약 29%~19%에 달했던 것에 비교하면, 부평지역은 유입된 피난민수가 다른 인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고, 또한 결과적으로 총인구수의 변화도 크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표 5> 출신지역별 월남동포 현황 (단위: 명)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계
부평출장소	920	406	2,048	1,868	612	5,854
인천	23,671	2,839	28,210	17,251	3,834	75,805

자료: 인천시, 『시세일람』(단기 4291년판), 1959, 18~19쪽.

그러나 1953년도의 경우 부평 지역민 가운데 원주민 13%가 유출되고 거기에 피난민으로 대체 구성된 것은 분명 큰 사회적 변화였으니, 이는 지역정체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표 5>의 피난민 출신지역을 보면 이동거리가 가깝고 또한 예전부터 교통로가 연계되어 교류가 활발했던 황해도와 평안도가 많다. 인천 전체적으로 보면 황해도-경기도-평안도 순인데 비해, 부평지역에는 상대적으로 평안도 출신이 많이 이주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평에는 평안도나 황해도 출신으로 6.25 때 반공 혐의로 체포되어 강제로 의용군에 편입되었던 포로들이 수용된 반공포로수용소가 있었다.²³⁾ 8백여 명에 달하는 이들 역시 석방 후 피난민과 같이 대부분 부평에 정착했을 것이다.

그런데 <표 3>에서 나타나듯 1953년경 피난민의 60%, 원주민의 약 18%가 구호를 필요로 하여, 부평 주민 가운데 23% 가량이 구호대상자란 사실은 당시의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을 짐작케 해준다.

2. 지역 경제상황과 이주민의 정착

이들 전제민과 피난민의 생계 대책과 정착문제는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였다. 그런데 당시 부평지역의 경제조건상 이들을 노동력으로 흡수하여 정착시킬 수 있는 일자리를 제조업에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표 6> 8.15 직후 인천시내 공장²⁴⁾

공장\구역	서부	남부	북부	부평	계
공장수	47(36.1%)	37(28.4%)	36(27.6%)	10(7.6%)	130(100%)
가동공장수	22	13	11	2	48
가동률	0.46	0.35	0.3	0.2	0.36

출전: 인천상공회의소구십년사편찬위원회, 『인천상공회의소구십년사』, 379쪽, 인천직할시사편찬위원회, 『인천시사』 중卷(1993), 916쪽.

23) 『부평 반공포로 즉시석방 시위』, 『조선일보』, 1953년 6월 18일.

24) 해방 직후 인천은 130여 개소의 공장을 관리하기 위해 서부, 남부, 북부, 부평 네 지구로 나누어 공업협회를 결성했는데, 1945년 12월경 이를 통합하여 인천공업협회연합회로 조직했다(『인천공업협회연합회』, 『대중일보』, 1945년 12월 18일).

〈표 7〉 1949년경 부평지역 귀속사업체

업종	업체명	소재지	관리인	자본금(원)	종업원수	경영형태	관할	
금속공업	동양제강주식회사	청천동	朱鍾俊(관리)	5,890,921	83	제강	중앙직할귀속사업체:상공부 소속	
금속공업	부평금속공업공사	부평동	尹國重(관리)	300,000		주식회사	경기도	
기계공업	조선베어링주식회사	산곡동	柳炳善(관리)	-	-	기계	중앙직할귀속사업체:상공부 소속	
기계공업	조선자동차공업주식회사(국산자동차(주))	서울 남대문로3가(부평 공장)	金龍周(관리)			자동차	주식	同
화학공업	富平가스공장	청천동	- (관리)			가스	지점	경기도관할
요업	부평요업주식회사(부평연와합자회사)	부개동	崔成淳(임대)	10,000	-		주식	同
식품공업	有限會社朝鮮아미노酸醬油會社	昭和町(부평동)	金重赫(임대)	250,000		醬油	유한	同
同	부평양조조합	계산동	尹順東(관리)	37,600		양조	조합	同
기타공업	부평인쇄소	부평동	金小錦	11,800	-	인쇄	개인	同
同	朝鮮工務店	부평동	-	-		工務	지점	同

자료: 『경제연감』 1949년판, 조선은행조사부, III 79~87쪽, III 104~109쪽.

〈표 6〉은 해방 직후 부평지역 귀속사업체의 가동 현황에 관한 것이고, 〈표 7〉은 그 귀속사업체에 관한 상세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표 6〉을 보면 인천시내 총 귀속사업체 130개 가운데 부평 소재 귀속사업체는 불과 10개(7.6%)로, 이는 1930년대 말 전시기에 중공업(군수공업) 육성정책에 의해 일본 대공장이 들어선 북부나 서부지역에 비해 훨씬 적은 숫자이다. 이는 일제 말 부평지역에 일본인 대공장이 설립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인천 구도심에 비해 공장수가 극히 제한적이었음을 말해준다.

〈표 7〉을 보면 금속·기계 4, 가스 1, 요업 1, 식품 2, 기타 2개 공장이었다. 그나마 공장가동을 조차 낮아 가동 공장은 2개 업체에 그쳤다. 요컨대 부평에는 1930년대 말 이후 대륙병참기지정책에 의해 홍중상공·국산자동차·일본고주과중공업·육군조병창 등의 공장이 설립되었지만,²⁵⁾ 대부분 금속·기계 관련 군수 생산으로 일제 패망과 함께 가동이 중지되었다. 따라서 부평역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에서 막 발달하기 시작했던 공업은 해방 후 자재난과 기술력 문제로 존립기반이 거의 해체되어 부평 지역민이나 또는 이주민을 노동력으로 흡수할만한 상황이

25) 앞의 글(2010), 116쪽.

아니었다. 이는 개항 이후 정미업, 양조업 등 소비재공업이 일찍부터 발달했던 오늘날의 인천 중구, 동구 지역의 경우 해방 이후 공장이 지속적으로 가동되고 또한 중소규모 공장이 신설된 것과 비교되는 점이다. 지역 내 수요나 자체 기술력에 기반하지 않은 군수공업이 해방과 함께 신기루와 같이 사라진 것은 당연했다.

또한 1948년 5월 중순 이후 북한의 송진 중단으로 부평 애스컴과 송림동 일부 지역에 등화용으로만 배전되었을 뿐 공업용 전기는 단전되어 주강 주물 방직 화학 등의 공장 가동은 멈추었다.²⁶⁾ 특히 금속, 기계가 주력인 부평 공장은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었다.

해방 직후의 이러한 취약한 제조기반과 낮은 공장가동률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1950년대에 들어서도 나아지지 않았다. <부표 1>을 보면, 1954년경 종업원수 10명 이상의 부평지역 주요 제조업체는 제재·목제품 및 가구제조업 3, 금속 및 금속제품제조업 6, 기계제조업 2, 유리 및 토석제품 제조업 2, 정미업 1, 주류제조업 1개 등 모두 16개였다. 이 중 귀속사업체는 부평연와공업, 불이기계공업, 국산자동차, 부평금속공업 등 4개 업체였고, 나머지는 모두 해방 이후에 설립된 중소규모 공장이었다.²⁷⁾ 16개 업체의 고용인원은 대략 560여 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은 1961년에 이르러 공장수나 고용자수는 증가했으나 전반적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962년판 『전국기업체총람』에 의하면, 직공수 5명 이상의 공장은 모두 36개로 고용인원은 총 1,495명에 불과했다((부표 2> 참조). 따라서 부평지역 이주민의 정착에 필요한 일자리는 공업이 아닌, 농업이나 서비스업 분야 등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서울, 인천 지역 전채동포의 대부분은 일제시기에 이른바 개척민이란 명목으로 조선에서 쫓겨나 華北 또는 華中 방면에서 황무지를 개척하여 농업에 종사하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생업은 농업이기도 했다. 동시에 식량난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도 생산력 증가 차원에서 이들 이주민에게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으로 대두되었다.

그런데 서울의 전채민을 이주시켜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기에 적당한 국유지가 분포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인근 부평 평야였다. 이에 敵産인 부평지역 加藤 농장

26) 『단전으로 인천 일대 3백여 공장이 마비상태』, 『조선일보』, 1948년 5월 29일.

27) 1953년경 인천지역 총공장수는 해방 전에 비해 155%로 많아졌으나 종업원수는 9,405명에서 9,108명으로 줄어들었으니 25명 이하의 종업원을 가진 소규모 자영공장이 격증했음을 알 수 있다(『자금의 빈곤으로 군소기업체 격증』, 『인천공보』, 1953년 11월 4일).

수십만 평을 전재민에게 제공하고 농장 구내에 합숙소를 만들어 집단영농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²⁸⁾ 마침내 1946년 서울시청 후생부에서 주도하여 부평의 市有地 약 30만 평에 3백호 가량을 이주시켜 잡곡을 생산하게 했다.²⁹⁾

또한 초기에 3.1운동을 준비·조직했던 33인의 유가족동지회에서도 1946년 영농으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신한공사로부터 부평지역의 농지 9만 평을 대부받고 집단영농을 시도했다.³⁰⁾ 6.25전쟁 상이군인들도 60만 평에 달하는 부평지역 군용지 임야의 일부를 불하받아 8만 평을 농지로 개간했다. 1952년 5월부터 시작된 이 집단농장(화랑농장)은 1955년에 이르러 상이군인과 그 가족 약 3백여 명으로 구성되었다.³¹⁾

이와 같이 해방 직후 전재민과 1950년대 초 한국전쟁 피난민이 부평으로 이주하여 생계를 도모하기 위해 접근할 수 있는 경제부문은 주로 농업이었다. 해방 후 이주민들이 모여 들어 농업으로 생계를 도모했던 대표적인 곳이 부평4동이었다. 이곳을 ‘신트리’라고 부르는 것은 ‘새로 터전을 이루었다’는 뜻의 신터리(新基里, 新垆里)에서 연원한다.

1960년대 말 부평공단이 들어서 1970년대에 공업도시화되기까지 부평지역은 역부근에는 상업, 서비스업이 발달했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광활한’ 평야였다. 부평은 여전히 김포와 더불어 경기지역의 대표적인 평야지대였다. 이러한 사실은 부평의 직업별 인구를 조사한 통계인 <표 8>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8) 「제일차로 부평에 집단영농」, 『동아일보』, 1946년 3월 22일.

29) 「전재동포를 移植」, 『조선일보』, 1946년 4월 11일.

30) 「삼십삼인유가족 부평서 집단영농」, 『동아일보』, 1946년 9월 7일; 「33유가족동지회 유가족총회 개최예정」, 『국민신문』 1948년 9월 25일.

31) 「화랑농장 미군서 원조」, 『상이군인 위한 집단농장』, 『동아일보』, 1954년 10월 22일, 1955년 3월 7일; 「자립자활의 길 찾은 화랑농장」, 「화랑농장의 일례」, 『조선일보』, 1955년 2월 9일, 1955년 3월 8일. 미군측에서 농업기술지도소·합숙소·농산물가공실·축산시험실 등의 각종 설비를 무상으로 건축해서 제공해주기도 했다.

〈표 8〉 부평지역민의 직업별 인구(1953~1958)

	1953.12		1954.12	
	부평	인천	부평	인천
농업	8,315(27%)	26,397(9.8)	9,132(30.4)	28,680(10.8)
광업	15	125	-	84
공업	1,135(3.7)	7,833(2.93)	976(3.2)	7,478(2.8)
상업	1,271(4.1)	21,872(8.19)	2,685(8.9)	21,410(8.1)
수산업	17	1,731	-	1,446(0.5)
교통업	241	2,432(0.91)	262	2,999(1.1)
공무자유업	1,562(5.1)	23,044(8.6)	3,563(11.8)	25,903(9.8)
其他有業	3,974(13.1)	1,043(11.6)	6,211(20.7)	46,189(17.5)
失業	1,334(4.4)	22,953(8.5)	1,120(3.7)	21,002(7.9)
無業	12,403(40.9)	129,484(48.5)	5,998(20)	108,433(41.1)
계	30,267(100)	266,914(100)	29,947(100)	263,624
	1957.12		1958.12	
	부평	인천	부평	인천
농업·어업	2,844(18.8)	136,53(14.6)	3,446(23.8)	14,814(16.6)
광업	5	198	15	113
제조업	119(0.7)	4,183(4.4)	113(0.7)	3,945(4.4)
건설업	167(1.1)	1,393(1.4)	149(1.0)	1,600(1.8)
공익사업	92	856		
상업	1,056(6.9)	9,517(10.1)	1,342(9.2)	10,373(11.6)
운수통신업	136(0.8)	2,377(2.5)	145(1.0)	3,088(3.4)
공무원	529(3.4)	4,946(5.2)	837(5.7)	9,388(10.5)
봉사업	464(3.0)	5,461(5.8)		
기타업	6,719(44.4)	30,196(32.3)	6,685(46.2)	29,704(33.4)
실업	2,996(19.8)	20,623(22.0)	1,716(11.8)	15,835(17.8)
합계	15,127	93,406	14,448	88,860

자료: 「직업별 인구」, 『시세일람』, 인천시(1954, 1955, 1958, 1959).

비고: 1957년과 1958년은 無業者가 산입되지 않은 통계임.

〈표 8〉을 보면 1953년 12월경 부평지역민의 약 41%가 무업자인데, 여기에는 유아·학생·노인 등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들 무업자와 실업자(4.4%)를 제외한 유업자(약 55%)의 직업을 보면 농업이 2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기타유업 13.1%, 공무자유업 5.1%, 상업 4%, 공업 3.7% 순이었다. 1954년 말에는 무업자수가 절반인 20%로 감소하면서 농업인구도 증가하여 30%에 달했다. 인천 전체의 농

업 인구가 10% 내외인 것에 비교하면 대략 3배 정도로 농업 인구가 많은 셈이다. 따라서 일제 말기 국부적으로 이루어진 공업화가 유산으로 계승되기에는 충분치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제 말기 한 때 부평지역은 공장 취업을 위한 이주민이 급증하여 10년 이내에 백만 명의 인구를 포용하는 공업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³²⁾ 그러나 해방이 되자 ‘공장 취업’이란 이주 유인은 신기루 같이 사라졌던 것이다.

1957년과 1958년에는 기타업종 인구가 가장 많고, 농업 종사 인구수는 18~23%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인천 전체 농업인구 비율보다 높으며, 제조업 종사자 비율도 더욱 낮아졌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1945년~1950년대 중반 부평지역의 이주 유발 요인으로는 해방과 전쟁이라는 역사적 계기이다. 인천항의 유입창구란 지리적 공간조건이 작용했다. 이 시기 이주민의 유형은 전제민과 피난민으로, 이들은 대개 행정당국에 의해 주도된 집단영농에 참여하거나 혹은 개별적으로 황무지 개간을 통해 정착했다.

IV. 기지촌의 형성과 이주민

부평에 대규모 이주민이 유입된 또 하나의 誘因은 경제적 요인으로, 이는 일제 말 인천을 대륙병참기지로 개발하면서 부평에 군수공장을 설치한 시기로 올라간다. <표 2>에서 나타났듯이 부평의 이주민 1세대가 이 때 유입되었다. 1939년 육군조병창 제1, 제2, 제3공장 설립 공사가 다다구미(多田組)·간토구미(關東組)·다마보구미(玉操組)·시미스구미(清水組)·하사마구미(間組) 등 5개 업체에 의해 시행되었다.³³⁾

이때 근로보국대 형태로 강제동원된 조선인과 토목·건축 기술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다. 조병창 공장이 가동되면서 노무자와 견습직공 모집이 수시로 이루어짐에 따라 노동자들의 이주가 증가했다.³⁴⁾ 그럼에도 전시 말기인 1944년에 이르러서는 병기의 급속한 증산에 필요한 노동력이 부족하자 인천중학·인천상업·

32) 『氣高萬丈의 부평평야』, 『동아일보』, 1940년 5월 12일.

33) 김홍전, 『인천경제사』(인천일보사, 2006), 93쪽.

34) 『인천조병창서 견습직공 모집』, 『인천육군조병창 勞務要員生 모집』, 『매일신보』, 1941년 11월 18일, 1942년 1월 18일. 노무자의 응모자격은 만 16세 이상 20세 미만 남자로 국민학교 졸업자로 제한되었는데 3개월 후의 임금은 약 41원 정도였으며 일본인에게는 6할의 加給이 주어졌다.

仁川高女·경성공업·용산중학 등 인천과 서울지역 학생들이 근로동원되기도 했다.³⁵⁾ 소총·총검·軍刀·탄약·차량을 생산했던 工廠에서는 조선 청년을 공원 및 공원견습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교육 훈련시키는 기술훈련소 역할을 자임하기도 했기 때문에 기술을 배우기 위해, 또는 징병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이들이 부평으로 모여 들었다.³⁶⁾

또한 미쓰비시중공업, 일본고주파중공업주식회사, 디젤자동차공업주식회사, 동경자동차공업주식회사 등의 자동차와 금속기계 관련 군수기업이 부평에 진출했다. 이들 공장 설립을 위해 건축 관련 기술자와 노무자가 모여 들었고,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취업을 목적으로 외지인들이 유입되었다.³⁷⁾ 부평역 주변에는 이들을 겨냥한 상인들과 기타 유흥업 관련자들이 모여들어 상업·서비스업지구가 형성되었다.

해방이 되자 조병창과 군수기업 그리고 다다구미 등 하청회사들이 철수하고 조선인 노무자와 직공들은 그대로 눌러앉았다.³⁸⁾ 미군부대가 조병창을 접수하면서 그 자리에 에스컴이³⁹⁾ 들어섰으니, 결국 1951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주둔했던 에스컴과 주변 기지촌은 일제 말기 육군 조병창에서 연원한 것이다. 정치사회적 격변으로 기지의 점령 주체가 바뀌었을 뿐 여전히 외국군대가 주둔함으로써 기지촌의 기능은 그대로 존속되었다.

에스컴이 부평평야의 절반을 차지하다 보니, 부평이 미군 지도에서는 ‘에스컴 시티’라고 표기될 정도였다. 미군기지과 거기에서 파생된 기지촌은 부평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으며,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에 이주민 유입의 또 다른 계기로 작용했다.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직종에는 노무자·미장공·벽돌공·운전사·정비공·용접공·배관공 등 기능직 과 비서·타자수·서기·은행출납원과 같은 사

35) 『병기 만드는 工員學徒 최초로 인천조병창서 작업』, 『제2차로 三校 인천조병창에 동원』, 『매일신보』, 1944년 5월 10일, 1944년 9월 2일.

36) 宮田節子 편, 『朝鮮思想關係資料集 5-朝鮮軍概要史』(고려서림), 114~117쪽.

37) 『부평사』2권, 467쪽

38) 예를 들어 (주)부평역지하상가 대표 김세훈의 부친은 일제 말기에 부평 조병창에 근무하기 위해 김해에서 올라왔는데, 해방 후 그는 미군부대에서 근무했다.(『자료편: 구술증언자료』, 『부평사』제2권, 487쪽.

39) 에스컴은 각종 군수물자와 장비를 보관하고 이를 필요한 미군부대로 수송하는 병참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1963년경 에스컴에는 모두 7개의 육군보급창고가 있었다. 이후 1972년 미8군에 대한 지원임무가 기능별로 분화되어 지역별로 분산됨에 따라 부평 에스컴의 부지와 시설 대부분은 1973년 6월 한국 국방부로 넘겨졌다(『부평의 역사』(2007), 205~206쪽).

무직 등 일반 산업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러 업종이 있었다.⁴⁰⁾ 에스컴 사령부 산하 121후송병원을 비롯한 20여 개 대소부대에는 1962년경 8천여 명에 달하는 한국인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었다.⁴¹⁾ 1961년 부평 소재 (직공 5명 이상) 36개 공장의 직공이 1,495명이었던 것에 비교하면⁴²⁾ 당시 에스컴이 부평지역 내 고용에서 점했던 비중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대 주변에도 미군부대 관련 소비를 겨냥한 상권이 형성되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한 기지촌 공간에서는 미군 상대의 상업구역이 중심을 이루었다. 미군부대 관련 한국종업원들이 받는 봉급은 한 달에 3천여만 원에 달했으며, 미군들도 매월 2만 달러 이상씩 소비했다. 이들을 상대하는 빠, 카바레 등의 유흥업소와⁴³⁾ 이발소·사진관·양복점과 같은 각종 자영업체가 성업하면서 지역경제는 호황을 누렸다.⁴⁴⁾ 1950년대 후반 에스컴 주변 부평동과 산곡동, 청천동 주민 가운데에는 봉사업이나 기타 업종에서 일하는 이가 전체 주민의 절반이나 3/4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⁴⁵⁾

남대문 도깨비시장의 물건이 모두 부평 미군부대에서 흘러나간 것이어서 남대문 상권의 원천이 부평이라고 말할 정도로⁴⁶⁾ 1950년대~1960년대 중반에 이 에스컴은 지역경제의 주요 부분을 담당했다.⁴⁷⁾ 특히 1960년대에 부평시장은 좋은 물건이 많기로 소문이 났는데, 이는 부평 미군부대 ‘캠프마켓’에서 각종 생필품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부평시장은 ‘미제’를 찾는 사람들로 늘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부평시장을 ‘인천의 이태원’이라고 부르는 것도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었다.⁴⁸⁾

40) 外機勞聯20年史發刊委員會, 『外機勞組20年史』,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1979), 63쪽.

41) 『부평의 역사』(2007), 206쪽.

42) <부표 2> 참조.

43) 에스컴 사령부 정문 앞에는 1천 7백여 명의 ‘양공주’가 살고 있었다. 해방이 되자 일제시기의 다다구미촌이 한국인을 상대하는 흥등가로, 그리고 관토구미는 미군을 상대하는 흥등가로 변화되었다고 한다(경인일보 특별취재팀, 『격동 한 세기 인천이야기』하(다인아트, 2001), 120~123쪽).

44) 『철조망주변: 미군부대촌의 현실』(5), 『동아일보』, 1962년 7월 28일. 또한 1954년 미군부대에서 부대 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500 대 1로 환산된 노임을 달러로 지불하기로 하자 부평지역에 갑자기 달러상이 증가한 것도 들 수 있다(『부평의 軍從業員 美弗로 봉급을 지급』, 『조선일보』, 1954년 11월 2일).

45) 『부평의 역사』(2007), 206쪽.

46) 『부평사』제2권, 346쪽.

47) “미군부대가 아니었으면 부평이 그렇게 크지 못했을 거예요. 그 전에 농사짓다가 미군부대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외지 사람들 많이 들어오지. 신트리 사람, 고니새말 사람, 부개동 사람들이 주로 미군부대 많이 다녀요. 수입이 좋았죠.”(『구술편: 증언자료』, 『부평사』제2권(2007), 470~471쪽).

48) 이소영, 『꿈꾸는 상인들의 마을만들기』, 국토연구원(2009), 21쪽.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각종 원조물자들, 속칭 ‘양키물건’들을 매매하여 재산을 모으는 이가 늘어나면서 소문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⁴⁹⁾ 부대 내 취업뿐만 아니라 미군부대의 물자 조달, 미군을 상대로 한 관련 상업·유흥서비스업도 외지인 유입의 계기로 작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초기에 여기에 모인 외지인들은 돈이나 벌어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모인 이들이었고, ‘양색시’와 미군이 있는 기지촌의 특성상 애들 키우며 정착하려는 이는 드물었다.⁵⁰⁾ 부평은 마치 “미국 개척시대에 골드러시로 몰려왔던 서부와 같은 곳”이었다.

그러나 1969년 집권한 미국 닉슨대통령이 1970년대에 들어서 데탕트(Detente)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한미군 7사단이 철수하고, 애스컴에 있던 121후송병원 등 군 시설이 1971~1973년 용산과 경북 왜관 등으로 이전했다.⁵¹⁾ 당시 한국인 2천 400여 명이 실직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애스컴 이전 사업이 끝난 1973년부터 부평 미군기지는 ‘캠프 마켓’으로 불리기 시작했다.⁵²⁾

부평에는 미군부대도 있었지만, 5공수부대, 9공수부대와 33사단, 60정비대대, 74부대 등 한국군도 많이 주둔해 있어 당시 대표적인 군사기지도시였다.⁵³⁾ 어떤 면에서는 부평지역의 특수이주민이라고도 할 미군과 카추샤, 한국군 사이의 폭행,⁵⁴⁾ 그리고 무엇보다 미군에 의한 폭행과 강도, 살인⁵⁵⁾ 부평 공간의 주요 사회적 이슈였다. 그리고 이는 외지인에게 군사기지도시란 부평의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한편 미군부대 종업원의 파업이나 분쟁도 주요 사회적 이슈였다.⁵⁶⁾ 1956년 6월 애스컴 55 보급창 44공병대, 37공병대, 8057부대 및 인천항만사 등에 근무하는 이들이 중심이 되어 인천지구미군자유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이는 1951년 4월 부산에

49) 경인일보 특별취재팀, 『격동 한 세기 인천이야기』하(다인아트), 123쪽.

50) 『자료편』, 『부평사』제2권, 365~366쪽.

51) 121후송병원은 1971년 5월 용산 8군영 내에 최신 병원을 신축하여 이전했다(『부평 美 121후송병원』, 『조선일보』, 1971년 6월 12일).

52) 『부평미군기지 터 역사적 재활용해야』, 『경인일보』, 1910년 2월 14일.

53) 『부평사』제2권(2007), 367쪽.

54) 1957년 5월 카추샤 부대 소속 한국군 2명이 자기 동료가 깡패에게 맞은 분풀이를 하기 위해 민간에 나와 길 가는 미군부대 하우스 보이를 칼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이번엔 부평서 또 행패』, 『조선일보』, 1957년 5월 5일). 또한 1957년 10월 미군과 카추샤 4명이 민간인 일가족 3명을 사소한 언쟁 끝에 무수히 구타한 사건이 발생했다(『韓·美兵 또 폭행』, 『조선일보』, 1957년 10월 16일).

55) 『2인조 미군 택시강도』, 『조선일보』, 1966년 3월 4일; 『부평 위안부 살해 美兵』, 『조선일보』, 1972년 3월 8일.

56) 『군인과 노무자 백여명 집단난투』, 『조선일보』, 1959년 2월 4일; 『外機務組富平支部 5백여명 無期罷業 돌입』, 『조선일보』, 1965년 10월 19일; 『전원 총파업 결의』, 『조선일보』, 1965년 10월 20일.

서 미군군수보급품의 하역검수용역회사 검수원노동조합으로 출발하여 1953년 7월 재조직된 전국미군중업원노조에 이어 두 번째로 조직된 것이었다.⁵⁷⁾ 그러나 1958년 말부터 노조의 개혁문제를 둘러싸고 집행부가 분열되자 에스컴 근무자들은 1959년 2월 별도로 에스컴지구미군중업원노조를 조직했다.⁵⁸⁾ 또한 인천자유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던 미군유류보급창 용역하청회사 소속 중업원들이 1957년 9월 독립 결성한 인천POL(美軍油類補給廠)특수노조 산하에, 부평지구 분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인천, 부평뿐만 아니라 부산, 과주, 동두천 등에서도 미군중업원노조가 각기 지역별로 활동하다가 마침내 1959년 11월 고용주인 주한미군사령부를 상대로 전국단위 미군노조인 전국미군노련을 창설했다.⁵⁹⁾ 전국미군노련은 1961년 2월 임금인상을 내걸고 노동쟁의를 제기했는데 부평지구의 조합원도 여기에 가담했다.⁶⁰⁾ 1966년에는 인천 POL지구 부평경비분회(한용실업 대행) 조합원 316명이 석달치 체불노임의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⁶¹⁾

1960년대 초반 제조업 종사자의 월급이 2만 6천 원~2만 8천 원이었는데 비해 에스컴 중업원은 직급에 따라 3만 9천~4만 9천 원을 받았으므로 당시 경제상황에서 미군 부대 취업은 구직자에게는 선호하는 일자리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사택, 기숙사, 식당, 식비 보조, 경조보조금, 산전산후 휴가, 생리휴가, 통근차량 제공, 위험수당, 퇴직금, 장학금 등의 후생복지 면에서는 국내 산업체에 비해 훨씬 뒤떨어졌다. 또한 일본의 미군중업원과 비교하더라도 여러 노동조건이 결여되고 있었다.⁶²⁾

1964년 9월에는 부평에 있는 보급사령부와 자료처리부 산하 500명의 중업원들이 대구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아 이사비용과 주택마련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여 이동수당을 관철시키기도 했다.⁶³⁾

57)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外機勞組二十年史』, 外機勞聯20年史發刊委員會(1979), 33~35쪽.

58) 『外機勞組二十年史』(1979), 36쪽.

59) 『外機勞組二十年史』(1979), 40~41쪽. 주한미군사령부는 전국미군노련을 미군중업원을 대표하는 노동단체로 인정하고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관해 협의는 가능하지만, 교섭이나 협상은 하지 못하며 또한 파업이나 태업과 같은 단체행동권 행사에 가담하는 중업원은 즉시 해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60) 『外機勞組二十年史』(1979), 42쪽.

61) 『外機勞組二十年史』(1979), 140쪽; 『노임체불 전면파업』, 『조선일보』, 1966년 11월 13일.

62) 당시 일본의 미군중업원은 노무비용을 일본정부가 부담했으며 따라서 단체교섭 당사자도 일본 정부였다. 일본 미군중업원은 퇴직금, 상여금, 법정 유급휴일, 언어수당, 벽지수당, 상여금, 産前産後 휴가, 생리휴가, 피복수당 등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다.

63) 『外機勞組二十年史』(1979), 86~87쪽.

당시 부평의 이미지는 에스컴의 미군 그리고 주변의 상업지구와 유흥업소로 인해 기지촌으로 표상되고 있었다. 미군을 상대로 한 양공주집, 한국 군인과 노동자를 상대로 한 색시집, 그리고 그들의 소비와 구매력에 기대어 활황을 누리는 부평시장과 양키시장, 그리고 한편으로는 혼혈아의 존재가 이 시기 기지촌 부평의 기억들이었다.⁶⁴⁾

V. 맺음말: 이주민과 부평 로컬리티

일제 말기 부평에는 우수한 일본 독점자본의 군수공장과 육군조병창이 들어서면서 토목기술자와 일용잡급인부, 그리고 공장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자와 기술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혹은 일본으로부터 이주하기 시작했다. 일제 말 일본자본의 진출에 수반하여 조선인 노동자의 지역간 이주 뿐만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일본인 기술자와 노동자도 이주했다는 것은 부평이 일본 독점자본이 의도했던 초국적 산업공간 정확하게 말하면 대동아공영권 내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했던 공간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해방이 되면서 공장 가동은 중지되었고, 더 이상 공장 취업을 이주의 유인으로 작용하지 못했다. 해방 직후 부평은 농업지대가 대부분이었고 부평역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어 서비스업종이 발달한 정도였다.

지리적 여건상 부평은 해방 직후 일본이나 상해 북경 등 중국으로부터 귀환하는 동포들의 정착지로 기능했다. 강제징용이나 징병, 농업이민 등으로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중국 화북지역·일본·남양군도 등 제국의 권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해방이 되자 인천항을 통해 귀환하면서 일부는 부평에 정착했다. 일제의 대륙침략전쟁으로 대개 강제적으로 이주했다가 귀국한 이들 전제동포들은 일제시기 토막민이나 거의 다름 바 없는 절대적 구호대상자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64) “제가 유년시절 여기 부평시장에서 놀았던 것을 기억하면 제가 철이 들어서 봤던 미군부대 주변, 그리고 소위 말하는 학교에서 만날 수 있었던 혼혈아, 양색시들이 많았던 신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해서 먹고 살던 부평시장, 이런 광경이 생각나요. 지금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 이 뒷골목이 슬잡이였고, 주로 요새는 림살롱이라고 그러지만 그때는 색시집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뒷골목에 많았죠. 지금 이 문화의 거리 뒷골목 한 골목 넘어가면 양키시장이라고 했는데 … 수통, 미군군복 등 미군들이 썼던 각종 용품들이 쪽 나와 있었어요.”(『PAT의류매장 인태연씨(1962년생』, 『부평사』제2권, 501쪽).

심각한 주택난으로 인해 최악의 위생상태에서 노숙하는 많은 전재동포들은 원주민 특히 전재민 구호모금 대상자인 (일제시기에는 대개 지역 유력자로 행세하던) 부호들에게는 ‘송충이’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기도 했다.

한국전쟁 때에는 주로 평안도, 황해도 지역 피난민이 인천항을 통해 유입되어 부평에 정착했다. 이들 피난민의 60% 이상이 역시 심각한 생계 위협을 받는 구호 대상자였다.

전재민이나 피난민들은 개별 단위로 산발적으로 정착하기도 했으나, 대개 피난민수용소 시설이나 혹은 간석지나 황무지 개간과 같은 정착정책에 의해 집단적으로 터를 잡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피난이 대개 마을 문중·친족별로 이루어졌던 결과 그 연장선상에서 집단적인 이주·정착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1945년~1950년대 부평에는 적산이었던 일본인 농장을 불하받아 농업을 영위하는 전재민·피난민들이 정착한 이주 공간이 형성되고 있었다. 부평지역에서는 바로 신타리(부평4동)가 이러한 대표적인 이주공간이라고 할 것이다. 피난민의 거의 대부분이 구호대상자였고, 따라서 생활에 약착을 떨 수밖에 없는 이들 피난이주민에 대한 원주민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강한 생활력을 가진 피난이주민들의 경제력이 원주민보다 우월해지고, 이들이 부평시장의 상권을 주도하는데 대한 질시의 시선이었던 것이다.

한편 부평에는 서울과 인천 대도시의 주변부적인 위치로 인해 한센병환자수용소나 형무소 같은 ‘혐오시설’이 유치되기도 했다. 또한 일제시기에 설치되었던, 거리의 불량자를 수용하여 구울교육을 통해 노동자로 탄생시키는 ‘복지관’도 여전히 존재했다.

전재민과 피난민의 집단수용소, 상이군인들의 집단농장, 그리고 한센병환자수용소와 형무소, 불량자교화시설 등이 다수 입지한 곳이라는 부평의 이미지는 곧 ‘타자성의 로컬리티’로 투영되었다. 즉 1940년에 인천부로 편입되어 해방 후 인천시민이 되었으나, 구술에서 나타나듯 부평민들은 여전히 부평지역이 인천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차별받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1950, 1960년대 부평 이미지에 작용한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점은 에스컴과 주변 기지촌이었다. 해방 후 미군이 일제 말에 설치된 육군조병창을 접수함으로써 형성된 에스컴과 기지촌은 이 시기 부평 지역경제의 구심점이었다. 미군부대 취업을 위해 그리고 미군과 기지촌을 상대로 한 자영업과 기타 상업활동을 목

적으로 타지인들이 부평으로 유입되었다. 당시 기지촌 주변의 인구유입 현상에 대해 부평사람들 자신이 서부 개척시대의 ‘골드 러시’에 비유할 정도였다. 그들 이주민은 부평시장의 상인, 이발소·사진관·제과점 등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달러상, 미군 출입 바의 양공주 등 다양한 군상들이었다. 그리고 미군, 한국부대의 군인들, 카추샤 등도 군사기지도시인 부평의 특수 이주민이라 할 수 있었다. 1950~60년대 기지촌 주변에 유입된 이들 이주민이 만들어낸 이미지는 곧 부평의 기지도시란 로컬리티 형성에 작용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전재민과 피난민의 이주공간, 그리고 기지촌 주변 이주공간, 이 양자는 이주의 유인이나 동기가 매우 이질적이었고 이에 따라 정착과정도 상이했다. 그러나 양자가 표상하는 이미지는 오늘날 부평의 역사적 시공간에 로컬리티의 구성요소로 내재되어 있다.

부평지역 이주의 특징으로는 특정 국면에서 초국가적 일면을 보이거나 또는 이 면에서 그 영향을 받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1930년대 말 군수공업화정책에 따라 인천이 기계기구공업지구로 개발되면서 부평은 일본 독점자본의 진출과 함께 조선인의 지역이주 뿐만 아니라 일본인의 초국적 이주 공간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부평지역 이주의 초국적 맥락은 1950, 60년대 기지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물자와 한국인에게 지급되는 임금, 그리고 기지촌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미군들의 소비와 같은 것도 결국 초국적 맥락에서 작동하는 지역이주의 유인이라고 할 것이다. 정치적 요인과 인천항이란 지리적 조건에 의한 전재민의 귀환과 피난이주민의 유입도,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면 태평양전쟁이나 한국전쟁의 성격을 염두에 두면 그 역시 초국적 영향력에 의한 이주현상이었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다루지는 않았으나, 1960년대 말 이후 들어선 부평 제4 수출공단의 조성을 위해 유치한 제일교포 자본도 부평지역 이주에서 작동한 초국적 영향력이었음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1960년대 후반 이후 수출드라이브정책 실시와 함께 부평에 수출공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종전의 전재민, 피난민을 위주로 한 이주와는 다른 양상의 이주현상이 나타났다. 공단의 강력한 노동력 흡수는 대규모의 이주를 유발했는데, 이는 부평의 로컬리티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다.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 별도의 연구를 필요로 한다.

<부표 1> 1954년경 부평지역 공장

	업종	회사(공장)	대표자	본점(사무소)	공장	종업원수	생산품
1	제재·목제품밧가 구제조업	大林林業株式 會社	李錫九	부평동 319		20	각종 製材
2	제재·목제품밧가 구제조업	富平製材所	閔德基	부평동 1		15	각종 製材
3	제재·목제품밧가 구제조업	大林産業(株)부 산공장	柳志泰	부평동 319의 5	부산시 부전동 20	12(115)	陸松,江松,合 板
4	유리밧토석제품제 조업	富平煉瓦工業 合資會社	崔成淳	京洞210 (연락처)	인천시 부개동 120	102	煉瓦,기와
5	금속밧금속제품제 조업	富興製作所	白貴男	부평동 350		15	건축용 경첩
6	금속밧금속제품제 조업	富平鑄物工場	黃植	부평동 669			농기구
7	금속밧금속제품제 조업	大陸製線工場	洪在祐	부평동 101		12	洋釘
8	금속밧금속제품제 조업	부평기계제작소	金允玉	부평동 85		12(15)	洋釘,鐵線
9	금속밧금속제품제 조업	天日製釘工業所	趙鍾聲	부평동 38		10(13)	洋釘
10	기계제조업-정밀 공구	不二機械工業 株式會社	朴性夏	서울 종로구 수송동	산곡동 125	53	베어링
11	기계제조업-수송 용기계기구	國產自動車株 式會社	金龍成	서울 중구 남대문로 3-95	산곡동 128	67(76)	각종 자동차 스프링
12	유리밧토석제품제 조업	三河研磨工業사	柳尙錄	청천동 412		35	金剛로-루
13	유리밧토석제품제 조업	世光製陶社	姜太福	해안동 3-3	청천동 413	31	食器
14	금속밧금속제품제 조업	부평금속공업주 식회사	尹日重	서울 중구 남대문로 1-28	청천동 244	62	鑄鐵品
15	식료품	京鄉精米所	姜漢成	갈산동		100	精米,精麥
16	음료제조업-주류	平安釀造合資 會社	金昌勳	부평동326		13	탁주, 청주

자료: 『전국제조업요람』, 대한상공회의소(1955); 『전국주요기업체명감』, 대한상공회의소(1956).
비고: 「종업원수」 항목의 ()안 숫자는 『전국주요기업체명감』에 의거.

〈부표 2〉 1961년경 부평지역 공장

	업종	업체명	대표자	공장	사무소	종업 원수	사업내용
1	음식료품제조업-약주, 탁주	富平釀造場	李炳俊	계산동 158		9	탁주
2	음식료품제조업-조미료	신한제분주식회사부 평식품공장	金龍成	산곡동 128		230	조미료
3	음식료품제조업-약주, 탁주	平泉釀造場	金昌勳	부평동 326		7	약주, 탁주
4	음식료품제조업-위스키, 소주, 주정	富興釀造株式會社	李仁珪	부평동 95		8	소주
5	製材및家具-가구	향천가구점	정창규	부평동 357		6	찬장
6	製材및家具가구	현대가구점	홍종규	인천시 부평동 249		9	옷장
7	화학제품-염산	新興化學工業社	閔雲植	산곡동 24			염산
8	화학제품-비누	富光油脂工業社	吳世文	부평동 235		7	세탁비누
9	석유연탄유리세멘트 및 土石製品-연탄	동신연탄공장	성백형	산곡동		12	연탄
10	석유연탄유리세멘트 및 土石製品-연탄	동양연탄공장	김기홍	부평동 357		11	연탄
11	석유연탄유리세멘트 및 土石製品-연탄	山谷煉炭工場	金善泰	산곡동 1		8	연탄
12	석유연탄유리세멘트 및 土石製品-연탄	新日 연탄공장	李雨天	부평동 384		10	연탄
13	석유연탄유리세멘트 및 土石製品-연탄	漢陽煉炭工場	趙炳泰	부평동		23	연탄
14	석유연탄유리세멘트 및 土石製品-연와 및 타일	부평연와공업합자회 사	崔成淳	부개동 120		487	내화연와
15	석유연탄유리세멘트 및 土石製品-기와	수원토관공업사	沈泰燮	부평동 389		12	기와
16	석유연탄유리세멘트 및 土石製品-기와	勝利企業社	黃南錫	부평동 172		15	土기와
17	석유연탄유리세멘트 및 土石製品-기와	錦南기와공장	張來復	부평동 854		5	기와
18	석유연탄유리세멘트 및 土石製品-기와	南淺기와공장	南宮德	부평동 189		8	토기와
19	석유연탄유리세멘트 및 土石製品-기와	富建瓦工業社	賓江界	부평동 1가 138		15	기와
20	석유연탄유리세멘트 및 土石製品- 도자기 및 토기	土器業	崔基英	경서동 24		32	도기
21	석유연탄유리세멘트 및 土石製品-시멘트 제품	대한부록크공업사	許棟	부평동 393		6	부록크

22	석유연탄유리세멘트 및 土石製品-시멘트 계품	부평도관공업사	沈雨燮	부평동 354		5	벽돌
23	석유연탄유리세멘트 및 土石製品-연마제품	三河研磨工業社	柳尙祿	청천동 413		28	금강로라
24	금속및금속제품- 제련 및 철강제품	富平製鋼工業株式 會社	趙昌善	청천동 244		67	주강
25	금속및금속제품- 일반금속제품	富平制作工場	金允玉	부평동 85		31	철정
26	금속및금속제품- 일반금속제품	富興공업합자회사	白龍顏	부평동 340		26	파이프, 소켓트
27	금속및금속제품- 일반금속제품	天日製釘工業	趙鍾聲	부평동 38		27	철정
28	기계기구-일반기계	富平鑄物工場	梁在德	부평동 609		32	방직기
29	기계기구-일반기계	三河 연마공업사	柳尙祿	청천동 413		24	금강 로라
30	기계기구-일반기계	신한베어링공업주식 회사	유병선	산곡동 125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8	90	볼밀로라베어링, 착암기부속, 스틸볼
31	기계기구-일반기계	한양금속공업사	김정모	부평동 20		99	재봉기
32	기계기구-농기구	林産鐵工所	林昌男	부평동 246		8	보습류
33	기계기구-전기기계 및 기구	光明碍子工業株植 會社	李重烈	청천동 403		42	통신애자
34	기계기구-자동차부속품	국산자동차주식회사	金龍成	산곡동 128		82	스프링
35	기계기구-자동차부속품	로타리서비스공장	白南直	부평동 738		9	자동차
36	기계기구-자동차부속품	興南工業社	金英澤	부평동 110		5	승합버스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기업체총람』1962년판(1961).

비고: 직공 5인 이상 고용 공장에 한정함.

• 참고문헌

- 『대중일보』, 『인천공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경인일보』.
인천시, 『시세일람』(1954, 1955, 1958, 1959).
조선은행조사부, 『경제연감』1949년판.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제조업요람』(1955).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주요기업체명감』(1956).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기업체총람』1962년판(1961).
인천시, 『인천시통계연보』(1961, 1963, 1970, 1990, 2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통계연보』(1995, 1996).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사』(1997).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제1·2권(2007).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의 역사』(2007).
外機勞聯20年史發刊委員會, 『外機勞組20年사』,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1979).
인천상공회의소구십년사편찬위원회, 『인천상공회의소구십년사』(1979).
인천직할시사편찬위원회, 『인천시사』상·중·하(1993).
김홍전, 『인천경제사』(인천일보사, 2006).
오미일, 『자본주의생산체제의 변화와 공간의 편성』, 『한국근현대사연구』53, 한국근
현대사학회(2010).
이영환, 『미군정기 전제민 구호정책의 성격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9).
최영호, 『제일한국인과 조국광복-해방 직후 본국귀환과 민족단체활동』, 글모인(1995).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강만길·안자코 유카, 『해방직후 ‘강제동원’ 노동자의 귀환정책과 실태』, 『아세아연구』
108,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2002).
이현주, 『해방 직후 인천의 귀환 전재동포 구호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29, 한국
근현대사학회(2004).
윤선자, 『해방 후 전남지역으로 귀환한 해외한인의 현황』, 『전남사학』22, 전남대학교
사학과(2004).

Bupyeong Locality and Migrant

—Focusing on the Period of 1945~1960's—

Oh, Mi-Il · Cho, Gwan-Yeon

At the end of Japanese colonial period, munitions factories and arsenals of Japanese leading monopolistic capital were built in Bupyeong. Consequently, civil engineers and day laborers as well as other workers and engineers, who desired to work in the factories, commenced to migrate from all over the country or Japan. This indicated that Bupyeong was a place the Japanese monopolistic capital intended to make as a transnational industrial area, precisely speaking, a place where the labor forces within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could 'freely' move. But these factory operations stopped upon liberation. Right after liberation, most of Bupyeong area was agricultural area and just some business district was formed around Bupyeong station where service industry grew.

Geographically Bupyeong was functioning as a settlement for the compatriots who returned back from Japan or China like Shanghai and Beijing right after liberation. The war victims most of whom were absolute relief recipients had to sleep out in the open under the worst sanitary condition especially due to a serious shortage of house.

During the Korean War, the refugees from Pyeongan Province and Whanghae Province were entering through Incheon Port and settled down in Bupyeong. More than 60% of those refugees were also relief recipients under a serious threat of livelihood.

The war victims or refugees settled down in several parts by individual but in many cases they settled down in a refugee camp or in a place as a group by the settlement policy such as cultivation of tideland or wasteland. The natives sometimes even kept a jealous eye on the refugee-migrants who had strong ability to maintain their livelihood and became superior economic power

than the natives so that they led the commercial supremacy in Bupyeong market.

Bupyeong's image that it was a place where many of refugee camps for war victims and refugees, collective farm for wounded soldiers, Hansen's disease patient camp, prison and enlightenment facility for tramp were located was projected onto 'locality of otherness'. In other words, Bupyeong citizen thought Bupyeong was still a segregated space neglected and excluded in Incheon even though it was incorporated into Inchoen-bu in 1940.

Meanwhile,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acted on Bupyeong's image in 1950's and 1960's was ASCOM and its neighbored military campside town, which were formed due to the U.S. Forces' takeover of the Japanese military arsenal after liberation and became a center of Bupyeong's local economy in that era. Strangers came into Bupyeong for the purpose of getting a job in the U.S. camp, making self-employed business toward U.S. soldiers and military campside town or making other commercial activities. The image created by the migrants around the military campside town in 1950's ~1960's acted on forming locality called Bupyeong's military campside city.

Key Words: Locality, Migration, Bupyeong, War Victims, Refugees, Military Campside Town

필자 E-mail: omil@pusan.ac.kr (오미일 · 조관연)

투고일: 2010년 7월 22일/ 심사완료일: 2010년 8월 18일/ 게재확정일: 2010년 8월 20일